



2017-59

「정치」

라오스의 반부패(Anti-corruption) 정책의 성과와 전망

동남아시아

이요한 연구원

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

💡 주요내용

- 라오스는 1975년 공산화 이래 라오인민혁명당(Lao People's Revolutionary Party)의 일당 집권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, 이로 인한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.
- 2016년 통룬 총리의 취임 이후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였으며, 이에 라오스의 부패지수(CPI: Corruption Perception Index) 순위는 2015년 139위(178개국 중)에서 2016년 123위(176개국 중)로 16계단이나 상승하였음.
- 통룬 총리의 반부패 정책 시행이 단기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만연된 부패를 청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.

1. 이슈 현황

▶ 라오스는 1975년 공산화 이래 라오인민혁명당(Lao People's Revolutionary Party)의 일당 집권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, 이로 인한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.

- 라오스는 1975년 이래 라오인민혁명당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고 있고, 야당과 시민단체를 허용하지 않으며, 언론의 자유도 없는 상황임.
 -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지속되면서 권력층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부패가 만연함.
 - 라오스가 최빈국가의 경제 수준에 머무는 동안에도 관료들은 부패로 막대한 부를 누렸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왔음.
 - 공무원 평균 임금이 월 200달러 이하(2016년 기준)임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사용하며, 대형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패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움.
- 라오스 정부는 부패를 줄이기 위해 2012년 공무원 급여를 100% 이상 대폭 올렸으나 국가재정의 위기로 이듬해 다시 삭감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.
- 라오스에 유입되는 수력발전 댐 건설, 광산개발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원조 자금의 유입은 관료들의 부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.

2. 원인과 분석

▶ 2016년 통룬 총리의 취임 이후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였으며, 이에 라오스의 부패지수(CPI: Corruption Perception Index) 순위는 2015년 139위(178개국 중)에서 2016년 123위(176개국 중)로 16계단이나 상승하였음.

- 라오스의 2016년 정권교체 역시 정부 최고위 인사의 부패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음.
 - 통싱 전 총리 재임 시절인 2015년 12월 재무부 장관이자 전 중앙은행 총재였던 푸팻(Phouphet Khamphounvong)을 비롯한 4명의 고위 관료가 지방도로 건설을 빙자한 ‘유령(ghost)’ 프로젝트를 진행한 혐의로 2015년 12월 체포됨.
 - 전 통싱 탐마봉(Thongsing Thammavong)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으며 2016년 상대적으로 부패의 문제가 없었던 통룬 시술릿(Thongloun Sisoulith)이 총리에 임명되었음.

- 라오스의 국가조사국(SIA: State Inspection Authority)은 최근 관료들의 부패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.
 - 2016년 수백만 달러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의해 착복되었으며, 부패로 인한 손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2,300만 달러에 이름.
 - SIA는 71명을 부패 문제로 조사한 후 이 중 25명을 체포하였으며, 1,900명의 중앙공무원과 14만 명의 지방 공무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음. 이에 따라 부패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와 검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.
 - 2016년 786개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98억 킵(한화 9억 원)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음.
- 통룬 총리는 개혁적이고 청렴한 이미지로 라오스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국내외의 기대를 받고 있음.
 - 통룬 총리는 부패의 해결만이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집권 정통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표명한 바 있음.
 - 통룬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총리로 재직하였으며, 2006년부터는 외교부 장관을 겸직하였으나 현재까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바가 없음.
 - 라오스 전문가인 위스콘신-메디슨 대학의 이안 베어드(Ian Baird)는 “통룬 총리의 투명하고 개혁적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”고 밝힌 바 있음.
 - 통룬 총리는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벌목과 국외 반출을 금지하였으며, 대외 개방정책을 통한 라오스 경제 제도의 개혁을 선도하고 있음.
 - 2016년 12월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고위 공무원에게 고급외제차를 제공하던 제도를 종료하는 총리령을 공포하였으며 통룬 총리도 자신의 승용차(BMW 7 Series)를 국가에 반납하였음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**통룬 총리의 반부패 정책 시행이 단기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만연된 부패를 청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.**

- 라오스의 부패지수(CPI: Corruption Perception Index) 순위는 2015년 139위(178개국 중)에서 2016년 123위(176개국 중)로 16계단이나 상승하였음.
 - 라오스의 부패지수는 2014년 145위에서 2015년 139위, 2016년 123위 등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.

- 이와 같은 성과는 통론 총리의 개혁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,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(AEC)의 출범에 따른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 따른 개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- 2016년 아세안정상회의,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대외적으로 라오스의 개혁적인 분위기를 표방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
□ 라오스의 반부패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지만, 이와 같은 성과가 내재되기 위해서는 통론 총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.

- 라오스 경제가 최근 10년 이상 7~8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, 부패 문제는 국민들의 최대 불만 요소가 됨.
- 수십 년간 만연했던 라오스의 부패 문제는 단기간 또는 외부적인 요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 의지와 관련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지방 정부의 경우에 통론 총리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반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음.
- 논쟁이 되었던 팍벙(Park Beng) 댐에 대한 MRC의 간담회가 2017년 2월 22-23일 개최됨으로써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 또한 통론 총리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우려되고 있음.
- 통론 총리가 반부패 정책을 강화할 경우 그의 정치적 기반인 고위 관료들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, 반대로 완화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잃을 수 있어 향후 통론 총리의 선택이 주목됨.
- 라오스의 경제성장과 대외 개방에 따른 부패 해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경쟁력의 필수 요건임을 고려할 때 통론 총리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것임. **EMERiCs**

출처

- 이요한. 2013. 「메콩강의 진주」 (한울출판사)
- 한명규. 2015 「비밀의 라오스」 (매일경제신문사)
- Asia Times. "Little Laos tackles big corruption," 2017. 2. 16.
- Global Investigations Review. "Laos: anti-corruption laws key to economic development," 2016. 9. 20.
- Intergovernmental Bodies. "Transparency International Calls on Southeast Asian Governments to Set up ASEAN Integrity Community." 2014. 12. 18.
- The Nation. "Killing the Mekong dam by dam. 2017. 2. 14.
- Transparency International,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-2016.

💡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